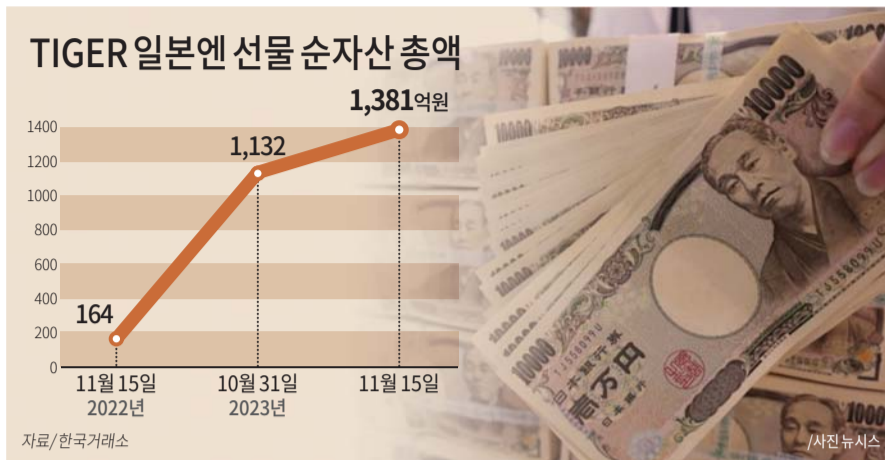


# 33년 만에 '수퍼엔저' 임박... '엔화예금·ETF' 투자 열풍

원·엔환율 100엔당 881.07  
환차익 기대하는 투자자들 급증  
엔화예금 열흘새 8737억 늘어  
엔선물 총액도 전년비 7배 ↑



100엔당 880원.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엔화예금' 개설과 '엔화 ETF' 투자가 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이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소 투자 기간을 1년 이상 두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서울 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엔환율은 100엔당 881.07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100엔당 953.18원을 기록했을 때보다 72.11원 떨어진 수준이다. 달러로 보면 1달러당 150.4엔이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전 세계 물가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일본만이 홀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부

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까지 치솟자 금리를 기존 연 0.25%에서 연 5.0%까지 올렸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금리를 연 -0.1%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가 늘고 있는데, 공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동안 소비침체가 계속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월 0.8%에서 3.0%로 겨우 올랐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다, 금리를 인상해 또다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경우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엔화예금·ETF 투자 확대

이에 따라 향후 엔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엔화예금과 엔화ETF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1조1090억엔(약9조6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조엔을 넘긴 이후 열흘 만에 1005억엔(8737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엔화예금 잔액(5789억

엔)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신한은행의 신한 밸류업(Valu e-Up) 외화 회전 정기예금은 금리변동 기간(1·3·6개월)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에 시장 금리를 반영해 운용한다. 우리은행도 금리변동기간(1·2·3·6개월)을 설정하면, 매 금리 변동 시기마다 금리를 반영하는 우리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을 제공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금리 변동 시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복리로 금리를 지급한다.

엔화 ETF 매수도 늘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엔화 연계상품인 'TIGER 일본엔선물'은 순자산총액이 지난 14일 기준 1381억원으로 지난해 말(1131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164억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다.

TIGER 일본엔선물은 원·엔간 환율을 기초로 엔 선물지수를 추종한다. 증권사에서 위탁증거금이나 별도의 파생계좌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 ◆엔화 가치 상승 속도 ↓...저점서 분할 매수 필요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기수익화를 피하기 보다 저점에서 분할매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선 미국의 금리인하로 전환하거나 일본이 금리인상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장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일본은 과도한 변화를 지양하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자본시장영업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일본은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며 "엔화가 과도하게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등가능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은 높게 예측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이코노미스트는 "엔화는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약세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엔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전 사업 원점 재검토' 나선 카카오... 계약재 속 경영쇄신 될까

배재현 대표 구속에 독과점 논란 등 비상경영 단계 인식, 쇠신작업 작수 외부 감사 '준법과 신뢰위원회' 구성



카카오 판교 아지트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가 경영 쇠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반등의 신호탄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진 교체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다만, 시세조종 의혹으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계열사 독과점 논란 등 계약재에 휩싸이면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 13일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

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여기에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도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일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플랫폼의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논란이 집중 조명되면서 수수료 개편의 물론 기업공개(IPO)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의 수수료를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배차시스템의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카카오 경영진은 현 상황을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쇠신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전날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맹택시 사업 구조 변경 ▲수수료 수준 현실화

▲택시 배차 문제 개선 등 3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카카오는 외부 감사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준법위)도 구성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내용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는 목표다.

실제 카카오는 이날 준법위 1기 위원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수수료가 3% 이하로 떨어지면 회사의 핵심 사업인 택시 부분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IPO까지 무기한 연기되며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눈높이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카카오 주가는 올해 들어 12.71% 하

락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26조5000억 원에서 현재 20조6000억 원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16위로 밀렸다.

다만, 계약재 속에서도 카카오의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카카오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4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1609억 원으로 16.3%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단기 매수를 추천하며 목표주가는 4만5000원을 유지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용 통제 전략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익 기여도 높은 부분들이 산업 환경상 단계에 가파른 회복과 성장을 보이긴 어렵다"며 "향후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신규 사업 부문이 불확실하고,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아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 '쉬웠음' 청년 41만명... 정부, 노동시장 유입에 1조 투입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인구 감소 속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단계별 정책으로 노동 이탈 최소화



(사진)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책정했다.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 하지 않는 '쉬웠음' 인구가 20·30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고용 촉진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쉬웠음' 인구는 매일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에서 4.9%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던 '쉬웠음' 인구는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쉬웠음'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웠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원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업에 9900억 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

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 50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일반계 고교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경력개발 경로 등을 마련해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민간·공공 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7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일부(50%) 면제한다.

고용부 등은 재직 중인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